

POLITICS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제주항공참사 지원 국회서 특별법 통과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지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社團)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전남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성오 기자

시의회, 예산정책 현황 자료 '예산정책리포트 2호' 발간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지난해 11월 첫 발간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한 이번 리포트는 66쪽 분량으로 현장탐방, 현안 분석, 예산정책동향, 예산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인 '현장탐방'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빛고를 창업스테이션, 빛그린 직장어린이집, 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도시철도 2호선 한바퀴' 코너에서는 2호선 총연장 37km를 걸어서 한바퀴 돌며 현장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 시민들의 이야기를 '날것 그대로' 담았다.

1~2단계 공사 상황과 시민 불편사항, 광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대·자·보 도시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견해를 밝혔다.

호남권 최대의 창업거점으로 지난해 12월 준공후 본격 가동을 시작한 '빛고를 창업스테이션'의 문제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들의 사회적임금 보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빛그린 직장어린이집'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꼼꼼히 다뤘다. 정승기 기자

한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민주 “권한 남용·내란동조세력 헌재장악 시도”

국힘 “마은혁 임명은 잘못·이완규 ‘미스터 클린’” 우의장 “인사청문회 요청 받지 않을 터” 철회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그동안 보류해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양당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쟁의 심판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대통령 및 후보자 지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명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으나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보류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지도부가 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는 한 번으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더라면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의결했다. 반면 (한 대행이) 대통령 이 지명해야 될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위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에 대해서 유감스

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흡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논평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

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문을 내고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6·3 조기 대선

김두관 “어대명 경선으로 정권교체 장담 못 해”

광주서 대선 출마 선언…“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8일 광주를 방문해 “어대명(아차피 대선은 이재명) 경선”으로 정권교체를 장담할 수 없다”며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어대명 경선은 민주당의 의가 아니다.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시대적 과제를 국민통합 정치와 개혁을 실천할지 의문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원자이자 심장이며, 광주 정선은 저 김두관이 걸어온 정치적 좌표이자 신념이다”며 “저는 오늘 이곳 광주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혁명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은 또 “국민이 함께하는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국가의 기틀을 세우게 할 때이다”며 “지금은 정치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때이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열 수 있는

개인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과의 최후의 대결로, ‘호헌 대 개혁’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불순한 세력이 다시는 민주공화국의 소중한 가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7공화국 정부는 실질적인 주권재민, 국민 권력 정부가 돼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 정치혁명의 길이다.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연합 정권교체’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경계를 넘어 탄핵에 동의한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로 ‘국민연합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인이 갖춰야 할 일관된 소신과 책임감을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한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행동하는 것



첫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을 지켜봤다”며 “변방의 작은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패권 정치의 강고한 벽을 깨뜨리는 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87년 헌법을 넘어서 국민통합 분권 민주주의로 가는 정치혁명의 길에 힘을 실어 주고, 압도적 정권 교체와 분권 연합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인이 갖춰야 할 일관된 소신과 책임감을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한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행동하는 것

을 지켜봤다”며 “변방의 작은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패권 정치의 강고한 벽을 깨뜨리는 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정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국민헌법 만들 것”…“비주류의 기적 되겠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정선) 대표(사진)는 8일 “호남 출신 이정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감동의 드라마이자 비주류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 출마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1000만명이 서명한 국민 청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만 발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사실상 국민이 발의하게 하겠다”며 “국민의 의지가 담기고 국민이 추진하는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주의를 끝장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개선, 정책 공약 이행 공개 평가를 정치권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세 세 우기와 제과 정치, 사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스위스식 순번제 집단 지도 체제 운영을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을 겨냥해 “미래 세대에 기회를 돌려주겠다”며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은 27살의 젊은 분이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30대 총리들이 나타났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20대 장관급, 30대 총리급 인사들을 국민이 자주 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정선) 대표(사진)는 8일 “호남 출신 이정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감동의 드라마이자 비주류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 출마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를 결심한 데 대해 “우리 정치가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대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국민 중심제 국가를 만드는 일에 한번 꼭 관여하고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선 “빠르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그 부분은 역사가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고 대선을 치르게 됐고 마지막 국민의 심판이라는 판결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선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스트 방식 경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선에 참여한 사람에게 많은 액수의 경선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이재명, 당대표 사퇴…다음 주 대권 도전 선언

文정부 출신 포함 캠프 꾸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임대표가 오는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 측은 8일 “이 대표가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이 대표도 대선 준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도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꼈다.

조기 대선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거론할 경우 자칫 오만한 모습으로 비쳐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날짜가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그간의 구상을 토대로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홍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문제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

원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계파를 아우르는 캠프를 꾸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상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명(천이재명)계 상당수가 이미 당직을 맡고 있어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캠프가 발족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하고 출마선언문에 담은 메시지를 기다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출마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민생 우선’ 기조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를 포함한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조기 대선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로 대통령 권위로 인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물 제거하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

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과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설치·게시 할 수 없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